

왜 보도 매뉴얼은 잘 안 지켜질까

세계 최고 수준 매뉴얼, 기자 DNA에 스며들진 못해

송종현 /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크고 작은 재난을 겪으며 우리 언론도 엄연히 재난 보도준칙과 재난관련 정부 고시, 재난 보도 매뉴얼, 재난방송 매뉴얼 등을 갖췄다. 그런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대체 왜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 보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언론에 책임을 묻는 법률적, 제도적 조치를 고려할 때 인가. 편집자 주

세월호 참사는 재난 상황을 대하는 우리 언론의 태도에 큰 경각심을 준 사건이었다. 속보 경쟁에 정확한 보도 원칙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재난에 대한 전문성 부재,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무례한 보도 태도는 언론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이를 계기로 2014년 9월에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 등 5개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재난 관련 취재와 보도의 일반준칙, 피해자의 인권 보호, 취재진의 안전 확보, 현장 취재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보도준칙이 제정된 바 있다.

또 경주와 포항에서 리히터 규모 5.0 이상의 대형 지진이 발생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매뉴얼과 관련 고시의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고, 방송평가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재난

방송 실시 관련 항목을 반영하기도 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재난방송 제공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인 재난방송 매뉴얼을 제정해 운영하게 돼 있다.

재난 보도준칙과 재난 관련 정부 고시, 재난방송 매뉴얼 등 외견상 재난 보도 매뉴얼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 4월에 발생한 속초 산불 사태 당시, 국가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의 안이한 태도가 여론의 뜻매를 맞은 바 있다. 산림청이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지 53분이

“

준칙이나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언론사 간부들의 공적 책임의식이나 저널리즘 윤리의 부재로만 설명되지는 않을 것이다. 인터넷 포털과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뉴스 유통과 소비 구조가 언론사 내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문제가 증폭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

지난 후에야 특보 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약 10분간 특보를 내보낸 뒤 정규 방송을 내보내고, 20분 만에 다시 특보 체제로 전환했다는 점이었다. 재난방송 주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재난 주관방송사의 추가 선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심각' 단계 발령 1~2시간 후에야 특보를 내보낸 MBC와 SBS 역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처럼 특보 방송이 우왕좌왕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됐다.

언론의 '안전 불감증'

지난 5월 말 형가리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 역시 재난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되풀이 했다. 사고 직후부터 사망 보험금과 배상금을 예상하는 보도가 쏟아졌고, 희생자와 그 가족의 신상이나 개인적 사연에 집착하는 보도 태도도 여전히 반복됐다. 참사의 원인과 수습 과정을 전달하고, 희생자와 가족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을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보도였다. 우리 사회에서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은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곤 한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다짐하는 대책이 발표되곤 하지만 임시방편에 그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만을 추구하는 언론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사건사고에만 해당하는 것일까? 재난 보도준칙이나 재난방송 매뉴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은 이와 얼마나 다를까? 재난 보도와 관련된 매뉴얼 또한 임

시방편에 불과한 것일까? 도대체 왜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는지, 많은 의문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 재현될 뿐이다.

재난 보도준칙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한 언론인은 준칙의 성패는 현장 기자나 회사가 아니라 편집국, 보도국 간부의 손에 달려있다고 확신에 찬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¹⁾ 본사 데스크는 현장 취재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준칙 제9조), 무리한 취재나 제작을 요구해서 정확성을 소홀히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준칙 제10조)는 두 가지만 지켜도 문제는 크게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현장의 기자가 낙종에 대한 불안감과 뜻밖의 기사 내용에 대한 초조감을 떨쳐내고 정도를 지킬 수 있도록 돋는 것도 간부들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오랜 현장 경험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보여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하지만 준칙이나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언론사 간부들의 공적 책임의식이나 저널리즘 윤리의 부재로만 설명되지는 않을 것이다. 인터넷 포털과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뉴스 유통과 소비 구조가 언론사 내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문제가 증폭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먼저 속보를 내는 언론사 뉴스가 수많은 조회수를 선점하고,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구조다 보니, 사실 검증이나 피해자 중심의 보도는 무시되기 십상인 것이다. 속보 경쟁을 통해 클릭 전쟁을 치르는 인터넷 회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클릭 수가 포털의 '많이 본 기사'의 순위를 결정하고, 언론사의 영향력을 기준하는 지표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에서 보도 매뉴얼 준수는 필연적으로 생략될 수밖에 없다.

1) 심규선, <'기레기' 오명 벗기, 편집·보도국 간부 손에 달려>, 『신문과방송』, 91-99쪽, 2014. 10.



— 청원종료 —

자살 등에 있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언론사에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참여인원 : [12,177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시작 2017-12-18 청원마감 2018-01-17
청원인 kakao...***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담면판료

자살 보도에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언론사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라는 국민청원
<출처 -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문서로만 존재하는 보도 매뉴얼

최근에는 재난 발생 시 현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보자와의 인터뷰를 적극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공식적인 정보나 통계가 아닌 개인적 경험과 목격 내용이 여과 없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고,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데 혼동을 주기도 한다. 합리적 의구심을 갖고 정보를 검증해야 할 언론의 책무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언론사의 자율적 보도 매뉴얼 준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게 되고, 언론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언론에 사후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얼마 전 열린 <재난 피해자 명예훼손과 언론의 역할> 토론회에서, 법조계 패널은 “언론은 정확성보다 속보성, 객

관성보다 선정성에, 피해자 사연 부각에 관심을 갖는다”며 재난 보도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준칙 위반 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재난 관련 법령에 명예훼손죄를 추가하는 방안과 신속한 정보도 관련 입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²⁾ 또 2017년 말에는 자살 보도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언론사에 법적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게시돼 1만 2,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례도 있었다.³⁾

보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언론에 책임을 묻는 법률적, 제도적 조치가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지, 또는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언론의 자율적인 준수를 전제로 하는 보도 매뉴얼은 말 그대로 취재와 보도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지침 또는 안내서일 뿐이다. 우리 언론의 보도 매뉴얼은 해외 주요 언론사에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작성돼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매뉴얼이 책상 위의 문서로만 존재할 뿐, 기자의 유전자에는 각인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판단과 행동은 큰 차이가 있는 것 또한 당연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혼들림이나 주저함 없이 보도 매뉴얼의 원칙에 입각해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언론인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서건,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실질적 제도 강화를 통해서건, 보도 매뉴얼은 의식의 영역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돼야만 할 것이다. ■

2) <세월호 이후에도 안 지켜지는 보도준칙>, 미디어오늘, 2019.7.18.
<http://www.mediator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60>

3) <자살 등에 있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언론사에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2017.12.1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9169?page=5>